대출 부담 확 낮췄다… 서울시, 中企·소상공인에 2.4조 투입

금리인하·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취약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설
고금리 대출 '희망동행자금' 전환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 공급
일자리·창업·배달 참여기업 확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에 나선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과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희망동행자금' 확대,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공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기업, 공공배달앱 이용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기존 1.7~2.2%에서 1.6~2.1%로 0.1%p 인하한다. 아울러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전면 면제한다.

16개 시중협력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경남, 부산, iM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 신협 등이다.

이로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200억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자금 신청은 2일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오는 3월 중)'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먼저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동행자금은 3000억원 투입될 예정으로 경영,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기존에 면책기업, 신용회복 완료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해 3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 공급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자금'도 전년 대비 200억원 늘려 총 12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한은행이 16억원 보증 재원으로 출연,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원을 공급한다.

그밖에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원 증액해 공급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불수능에도 주요 10개대 정시 8.2만명 몰려

경쟁률 5.29대1… 전년과 비슷
연세·서강·한양대 지원자 증가
서울·고려·중앙대는 지원 감소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 주요 10개 대학 전체 지원자 수는 8만2889명으로, 지난해보다 0.8% 늘며 경쟁률도 5.29대1을 기록했다. 영어 불수능과 사탐런, 의대 모집정원 축소 등 대형 변수 속에서도 상위권 수험생들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소신 지원에 나선 결과다. 다만 올해 정시는 수능 난이도보다 대학별 모집군 이동과 선발 방식 변화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합격선과 추가합격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전체 지원자 수는 8만2889명이다. 지난해(8만2244)명보다 645명(0.8%) 늘어난 수치다. 평균 경쟁률은 5.29대1로, 5.30대 1이던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은 경쟁률과 지원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서강대는 전년 대비 1024명(20.1%)이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한양대도 962명(10.8%) 증가했다. 이어 △연세대 538명(6.9%) △이화여대 213명(3.6%) △한국외대 196명(4.1%) △성균관대 166명(1.6%) 순으로 지원자 수가 늘었다.

반면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등 4개 대학은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모두 하락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는 ▲중앙대 1291명(10.2%) ▲고려대 956명(10.1%) ▲경희대 191명(1.6%) ▲서울대 16명(0.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10개 대학에서 지원자 수 변화가 나타난 데에는, 경쟁 대학의 모집군 이동과 선발 방식 변화 등이 주요 인이다. 올해 정시는 영어 불수능과 사탐런, 의대 모집정원 축소에 더해 정시 제도 자체의 변화가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을 지난해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시키면서 해당 모집단위 지원자 수가 1881명에서 98명으로 급감했다. 서강대는 SCIENCE기반자유전공학부를 나군에서 다군으로 옮기며 다군 지원자 수가 813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화여대 간호학부도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해 지원자 수가 251명으로 증가했다.

선발 방식 변화도 변수다. 성균관대는 주요 10개 대학 중 처음으로 정시에서 표준점수 대신 백분위 점수를 반영했고, 서강대는 기존 수학 중심 가중치에서 국어 또는 수학 우수 과목에 최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해당 대학뿐 아니라 타 대학 지원자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시 추가합격과 합격선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태안화력1호기 발전종료기념식.

충남도, 태안화력 1호기 30년 역사 마침표

전국 7번째, 도내 3번째 석탄화력 폐지

30년 동안 충남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의 불이 마침내 꺼졌다.

도에 따르면,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31일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전사 임직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가동을 시작한 이래 30년 6개월간 전력을 생산하며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충남과 국가 산업 전반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이번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일곱 번째,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이후 세 번째 사례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후속 대응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남도, 中企 육성자금 1.1조 지원

관세장벽 대응·AI전환에 정책자금 집중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평가제 도입해 혁신 기업 선별 지원

경남도는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의 핵심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 장벽 대응과 디지털 전환(AX) 고도화다. 경남도는 수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산업 육성자금'을 통해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스마트 AI 혁신·AX 전환' 및 '신성장 혁신 기업' 육성 자금을 신설해 제조업의 미래형 산업 전환을 뒷받침한다. 지식문화 서비스 산업과 청년 창업·벤처 기업 지원 규모도 확대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올해부터는 특별자금 평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선착순 접수에서 벗어나 실적과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혁신 기업들에 자금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

2026년도 1분기 일반자금 신청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된다. 설 연휴 전 신속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별자금은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1월 말 추가 공고 후 2월 중 별도 접수된다.

경남도는 2025년 1682개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000억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도 신산업 분야 중심 자금 지원으로 지역 경제 재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추진

R&D·해외 실증에 160억 이상 투입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공지능(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일대를 '첨단제조 존(ZONE)'으로, 수성알파시티 일대를 'AI혁신 존'으로 각각 지정하고 로봇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분야 기업에는 2027년까지 총 85억원을 투입하고, 해당 기업들은 해외 연구기관과 'AI로봇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R&D 분야 기업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사업을 위해 모두 83억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은 간호, 배송,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로봇 산업 관련 R&D와 비R&D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공모를 실시해 총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또 2027년까지 혁신특구에 AI로봇 영상데이터 보호·관리 및 시뮬레이션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